

⑤ **박물관 · 과학관 육성정책**

# 과학관 육성법 개정해 운영 · 지원체제 제도화 필요

글 | 조한희 \_ 계룡산자연사박물관장/대전보건대학 교수 hhcho@hit.ac.kr

현대 사회가 창조와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문화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박물관과 과학관은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과학기술문화 공급의 기반시설로서 대중의 문화적 과학적 소양 함양이라는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즉, 박물관과 과학관 문화는 공기 속의 산소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인 문화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와 생활화, 창의적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박물관과 과학관은 그 존재 가치가 있다. 신정부는 2008년 3월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실현을 주창하며 문화예술통한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님은 이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오바마도 국민들 앞에서 선언하였다. 궁극적으로 경제나 군사력도 경쟁력 있는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과학문화예술의 융합으로 이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좋은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과 문화 예술 분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박물관과 과학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한국' 건설을 위한 국가 경쟁력 증진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의 박물관과 과학관 육성정책을 확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박물관과 과학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박물관과 과학관의 지침서를 마련하는 일과 법령 및 제도적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의 구

축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부서 설립과 확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박물관과 과학관이 우리 선조들의 과학기술과 슬기로운 문화를 이어받은 유산의 보고로서, 문화산업의 센터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통해 인류를 화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국이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박물관 · 과학관 육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박물관과 과학관 육성 지침서 마련

박물관은 수집과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평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박물관 수는 그 수적인 면에서 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OECD국가 1관당 인구에서 미국 6만 명, 프랑스 4만6천 명, 일본 3만7천 명, 독일 2만 명인데 반해 한국은 12만3천 명으로 절대적으로 박물관수 면에서 저조하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 경쟁력의 낙후와 함께 문화 예술 전반의 열악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004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 박물관 현황과 국내 지역별 인구와 면적당 적정기관 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박물관 · 미술관 확충의 최소기준을 1001관으로 정의하고, 각 시 · 도 별로 적정 기관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물관 인프라 확충정책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정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까지 900

관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인구 5만3천 명당 1개관 수준).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인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박물관·과학관의 육성 지침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비교(1관당 인구수)**

국 가	연도	인구수(A)	박물관수(B)	1관당 인구수(A/B)
미국	2004	280백만명	4,609	6 만명
프랑스	2004	60 백만명	1,300	4.6 만명
캐나다	2004	31 백만명	1,352	2.2 만명
일본	2004	130 백만명	3,492	3.7 만명
독일	2004	82 백만명	4,034	2 만명
한국	2007	48 백만명	519	9.2만명

출처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전국 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연구, 2004)

**과학관 육성 정책에 적합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박물관과 과학관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과학창의재단을 운영 중이나, 전국적으로 균형을 고려한 과학관 확충 및 과학문화 확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16개 광역자치체의 과학기술 관련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전, 대구, 전북, 경북의 4곳에 지나지 않는 등 지방의 과학기술 행정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민간부문의 과학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기반도 미흡하다.

또한 사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 운영지원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상 사립박물관은 국도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수 없는 기관이며, 공공요금부담, 설립 부가세 부담 등에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근원적으로 과학관 육성법을 개정하여 과학관 운영과 지원체제를 제도화한다면 모든 육성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부서 확장**

국내 박물관 정책 업무는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담당했던 박물관 정책업무가 기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운영단 내 박물관 정책과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과에서 박물관 진흥계획수립, 국립자연사박물관업무, 국립중앙박물관 업무, 국립민속박물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처럼 박물관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진 부서가 변경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구를 강화하여 박물관육성 성과를 설립하여 강력한 정책과 행·재정력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립 및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과학관의 지원과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선각적으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과 국가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 권역별 거점체계 확립을 통한 네트워크 확립**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국립 박물관·과학관이 거점 역할을 담당하여 행정적 교육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이 각 분야별 박물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별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 박물관 조직체계가 확립될 때 박물관 과학관 간 네트워크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는 전국의 직속 국립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서 지역 공·사립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의 학예 인력 재교육, 마케팅, 홍보, 전시 등 이론과 실습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한다. 과학관에서는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공립·사립대학 박물관의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열악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 사립박물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사립과학관·박물관 건립과 운영 지원**

현재의 사립박물관은 향후 박물관 육성의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나 현재는 사립박물관의 지원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 박물관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립 박물관과 과학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은 과학문화적 슬기와 창의력 넘치는 한국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게 된다. 현행법상 사립박물관은 국도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수 없는 기관이며, 공공요금부담, 설립 건축 부가세 부담 등으로 국공립 설립과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설립주체는 다르지만 대국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박물관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박 물 관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관당인구(명)	218,181	204,255	172,519	166,089	157,131	134,078	122,800	93,933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미 술 관	대학	81	82	84	85	86	64	72	79
	계	46	53	60	65	74	80	92	115
	-관당인구(명)	1,043,478	905,660	800,000	738,461	648,648	600,000	532,609	417,391
	국립	1	1	1	1	1	1	1	1
	공립	8	8	8	10	14	17	18	24
	사립	36	43	50	53	58	60	7	87
	대학	1	1	1	1	1	2	3	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운영실태조사」, 「미술관운영실태조사」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계 개편에도 노력하여 재정 자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립박물관 축진을 위한 지원 제도로는 사립과학관 설립을 위한 인허가 등 '윈스톱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국내·외의 박물관과 과학관의 국제적 '협력망' 형성

11월에 개관한 과천과학관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에도 국립과학관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는 대전의 중앙과학관과 함께 지역에 거점적 과학관 체계의 확립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지역의 국립과학관을 활용한 전국적 국제적 협력망을 체계화할 때 국·공립·사립박물관들이 효율적·합리적으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상생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아이쿰, 즉 국제박물관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동향을 익히고 신지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한 교환전시, 수집 및 연구 활동은 세계 박물관 속의 대한민국 박물관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박물관·과학관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비형식적 학습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박물관의 중점적 기능이 전시 중심의 기능에서 체험을 통한 교육적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전시를 통한 1차적 박물관 경험을 넘어서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교육은 전시의 기획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활동의 부족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문화의 확산과정에서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전달하는 준교사급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항구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현재 박물관 교육 실정은 전문 교육자가 아닌, 연구직 전문직들이 자신의 업무와 함께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의 지위와 향후 발전성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박물관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전국의 박물관에서 활용 가능한 현행 교과와의 연계성 있는 교육 콘텐츠가 개발될 때, 박물관 교육의 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과 과학관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문화의 보급과 확산은 좀 더 용이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도 과학관이 제 몫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도 잘못된 과학문화의 확산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과학문화의 확산 거점이자 시작점인 과학관을 소홀히 운영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름없다. 과학적 전통과 과학에 대한 바른 이해, 이를 향유하는 사회의 애정이 없다면 첨단 연구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우리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문화국가를 만들어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㉔



글쓴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지구과학과 졸업 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의 웨스트민스터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단국대학교에서 국제경영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박물관경영마케팅회장, 충청남도 박물관협의회장, 한국재활용과학교육학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